우리은행 "라임 로비 사실무근"

가장 먼저 라임펀드 중단 "김봉현의 거짓 법적 조치"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19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로 작성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변호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은행장·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 시 이야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로비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4월 이후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말 라임펀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신규자금 유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상 김 전 회장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태영 기자
taeyoung8317@meconomynews.com

"소상공인 10兆 대출" 큰소리 치더니… 집행율 달랑 13%

4개월간 목표액 10조원의 20% 못 미쳐
은행이 대출심사… 저신용자 소외 지적
전문가들 "공익 목적 감안해 문턱 낮춰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정작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1·2차 중복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6일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 8일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목표액인 10조원의 13.6%에 해당한다.

정부는 4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지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당시,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은행에게 위탁하고 신속한 대출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카드론 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은행에선 대출을 꺼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차 긴급대출 시행 초 4.99%로 설정됐던 금리도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추고 중복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최근 3주간 대출건수와 금액이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5월 말부터 16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건수는 총 9만4147건, 액수로는 1조2157억원 상당이다.

정부의 대출 '장벽' 완화조치가 실시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3주간 총 3만6509건, 액수로는 639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약 4개월 동안 실행된 대출총액의 52.6%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대출금 총액은 아직 2조원에 못미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이 대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업계 관계자는 "부실여신을 줄여야 하는 은행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비상시국에서 공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중은행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까다로운 대출심사 외에도 은행 창구에서 대출 관련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의류관련 소상공인 A씨는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자격조건이 안맞는다고 거절당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상공인 B씨는 "혼잡한 은행창구에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고령의 상인들에게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Silver Lion Campaig

Title: EX 전에 사귀던 애인
Client: SANTA CRUZ WINE STORE 산타크루즈 와인 샵
Agency: PUBLICIS SAO PAULO 퍼블리시스 상파울로
Product: SANTA CRUZ WINE STORE 산타크루즈 와인 샵

Copy: 좋은와인은 무엇이든 조금더 로맨틱하게 만든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불완전판매 책임질 것"

강민국 "국책은행이 불완전판매라니"
윤종원 "속이면서 판매하진 않았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종원 행장은 "금융감독원 검사가 끝나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강민국 의원은 "펀드 가입자들로부터 불완전판매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추천받아 투자했는데 정작 상품은 증권사로 가입됐다고 증언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한 한 법인 고객은 "IBK기업은행 간부 4명이 회사로 찾아와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을 독촉했다"며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위험이 없고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위험등급을 무시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펀드 투자를 권유한 사례는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대책위 측은 전했다. 해당 사례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국책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우산을 뺏고 디스커버리 펀드를 속여 판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종원 행장은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상품제안서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절차를 거쳐 판매했다"며 "속이면서까지 판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완전히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운용한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정치 특혜 논란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만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taeyoung8317@meconomynews.com

"소상공인 대출 저신용층 우선"

금융위 제2차 대출규모
평균 74억원→753억원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층에게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0일 영상으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19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원 실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상품인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신용 등급, 특히 저신용층에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2차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2차 프로그램의 한도를 상향하고 1차 프로그램과의 중복 신청을 허용하는 등 전면 개편안을 실시했다.

개편 이후 일평균 지원 금액이 74억원에서 753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지원된 2차 대출은 1조7233억원으로 이중 1조542억원은 개편 이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신·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집행해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최유경 기자
orange@meconomynews.com